민주 광주시당위원장 경선 과열 조짐

파크골프대회·배구대회 등 이벤트 행사 잇따라

계파간 '편가르기' '줄세우기'로 당내 갈등 우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출과 오는 10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직적인 당원 동원 행사와 이벤트성 행사 등이 잇따르면서 선거 초반부터 과열·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당위원장 선거와 전당대회가 20여일 간격을 두고 잇달아 치러지는 민감한 시기에 정치성 행사가 연이어 개최돼 계파간 '편가르기' '줄세우기'로 인한 당내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4일 민주당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은 전날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시당위원장 선출작업에 들어갔다.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에는 현재 강기정(광주 북갑)·김재균(광주 북을) 등 2명의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의 뜻을 내비치고, 대의원 접촉 등 물밑 행보를 꾸준히 펼쳐가고 있다. 두 의원 측 모두 사실상 경선에 돌입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장애인단체와 정치인과의 친선을 명분으로 한 파크골프대회가 지역 정치인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의원 비서진과 북갑지역위원회 소속 시의원·구의원 등이 주축이 됐으며, 전·현직 시의원 등도 참석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전·현직 구청장 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 배구대회가 열리는 등 갖가지 정치성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도 대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식전행사에는 얼굴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는 강 의원의 지역위원회 소속 시의원이 주최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시당위원장 선거와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정치행사였을 것이라는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이어 15일에는 민주당 광주 북갑과 광산갑 지역위원회 소속 당직자와 대의원 등 50

강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시의회 예결위회의장에서 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혁신! 광주시당으로부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세를 과시했다.

지난 21일에는 당원 80여명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신안군 하의도를 방문하면서 여객선이 아닌 신안군 행정선과 해경 경비정을 동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최근에는 손학규·정동영·박주선·천정배 의원 등 당권 주자들까지 잇따라 광주와 전남을 방문하는 등 전당대회 경선이 뜨거워지면서 앞으로 이러한 정치성 행사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지역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는 10·3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느 때보다 각 계파 간 격돌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전대에 앞서 치러지는 시당위원장 경선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시당위원장 경선이 전당대회에 앞선 주류(강기정 의원)와 비주류(김재균 의원) 간 전초전 양상이어서 당 대표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원 동원 세 불리기 등 과열 분위기는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선은 따로따로 민주당 정세균 전 대표와 손학규 상임고문이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원혜영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를 나눈 뒤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터 前 대통령 북한간다

美, 北 억류 곰즈씨 석방 위해 특사파견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억류중인 미 국적의 아이 잘론 말리 곰즈씨 석방을 위해 지미 카터 〈사진〉전 대통령을 고위급 특사로 북한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23일(이하 현지시간) 알려졌다.

카터 전 대통령은 24일 미국을 출발해 북한으로 향할 예정이며, 북한은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하면 곰즈씨를 석방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카터 전 대통령이 내일(24일) 방북을 위해 출발할 예정이며 평양에서 1박을 하는 일정을 보내고 곰즈와 함께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지난 1994년 6월 1차 북핵위기 당시 평양을 방문,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한 이후 두 번째 방북이다.

미국은 이번 특사 방북의 목적을 곰즈씨의 무사 귀환에 국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카터 전 대통령이 이끄는 방북단에 행정부 인사는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결정에는 지난해 억류 여기자 석방을 위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했던 점도 고려됐으며, 카터 전 대통령은 독자채널을 통해 지난 7월 방북한 민간인사를 통해 방북 의사를 북한 당국에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인 곰즈씨는 지난 1월 불법입국 혐의로 북한에 억류된 뒤 4월 재판을 통해 8년 노동교화형과 7000만원(북한 원화기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8개월째 붙잡혀 있는 상태이다. /연합뉴스

"대북 쌀 지원 추석전 방안 나와야"

한나라 원내수석부대표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대북 쌀 지원 논란과 관련, "정부는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당과 정부가 어떻게 할지 이른 시일 내에, 추석 전에 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정부 들어 대북지원으로 나가던 30만~40만t의 쌀이 안 나가서 재고량이 올해 150만t가량으로 전망되는 등 2008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고량의 저장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저장창고의 보관료가 너무 비싼데다, 쌀이 많이 생산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이 쌀값 폭락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쌀 수급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민심이 이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 전대룰 갈등 속 '세몰이' 가열

손학규·정세균·정동영씨 등 지지자들 결집 나서

민주당 10·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의 향배를 좌우할 '전대룰'에 대해 계파 간 이견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각 주자들은 대표 경선 방식 등을 둘러싼 샅바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세몰이 경쟁을 시도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는 24일 김동철·정장선·김부겸·안민석·이춘석·이찬열·전혜숙 의원 등 지지 의원 10여명과 조찬을 함께하며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정례회동을 갖고 전당대회와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대표 경선에 국민여론조사가 최대 50%까지는 반영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전 대표는 23일 오후 마포의 한 호텔에서 권역별 지역 책임자 20여명과 회동, 당권 도전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석·박우순 의원과 486 측근그룹인 김교흥·우상호·한병도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최근 잇단 하부조직 이탈로 어려움을 겪자 바닥을 다시 다지기 위해 온갖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손 전 대표의 강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기존 지지층 복원을 위해 최근 순천과 고흥·보성·장흥·영암·강진을 돌았다.

전남도당 위원장인 김효석 의원은 원내에서 이낙연 의원, 원외에선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등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지지세력 확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캠프 측의 이야기다. 김 의원은 24일 담양·곡성·구례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뒤 고흥을 들렀으며 25일에는 대전에서 당원간담회를 갖는 등 당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다크호스로 꼽히는 박주선 의원은 지난 18일 구 민주계 출신 의원 모임인 '신송회' 소속 현역 의원 10명, 서울지역 구청장 5명 등과 회동, 협조를 약속받았으며 천정배 의원은 이종걸·장세환·최문순 의원 등 쇄신모임 소속 인사들 중 개혁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 전대 준비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정기대의원대회를 다음달 11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또 12일엔 부산시당과 경남도당, 13일 대전시당과 충남도당, 14일 제주도당과 울산시당, 15일 강원도당과 충북도당, 16일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18일 전북도당, 26일 서울시당과 인천시당, 27일 경기도당 정기대의원대회를 각각 열기로 했다.

전대 준비위는 이와 함께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지명직 최고위원 2인,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 수를 9명으로 확정하고 여성최고위원 선출을 위해 지명직 최고위원에 여성 1인 포함하는 하거나 최고위원 선거에 여성후보자가 출마했으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여성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전대 준비위 회의에서는 지도체제와 투표 방식, 당권-대권 분리 등 전대룰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으나 이견이 많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주선 의원 "민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해야"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24일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 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0·3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도전을 시사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벌인 여론조사에서 과반수의 당원과 대의원이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했다"며 "당원과 대의원의 뜻은 집단지도체제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집단지도체제는 새천년민주당에서 시작해 2002년 정권 재창출을 만들어낸 성공한 지도체제"라며 "2012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다양한 당내 인사들이 국민에게 평가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균등의 경쟁체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의 인사권, 재정권, 공천권 등 모든 권한이 당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 단일성 지도체제는 특정세력의 당권 독점을 구조화하는 제도"라며 "당권이 특정인에게 독점된 채 다른 대권 주자들이 국민에게 평가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민주당은 결코 2012년 집권에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의 정체성에 대해 "지금의 민주당은 중도개혁 정체성이 실종되거나 훼손돼 당의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면서 "중도혁신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